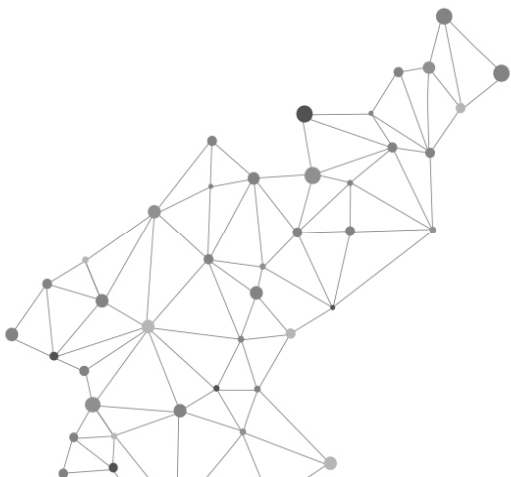


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의 물가와 환율: 관측, 추세 그리고 분석 | 최지영



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의 물가와 환율: 관측, 추세 그리고 분석

최근 북한경제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찰 변수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시장)물가와 환율이다. 물가와 환율은 북한경제의 상태와 추세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경제 연구 다수가 이 변수들의 관측치를 중요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물가와 환율이야말로 북한의 거시경제 변수들 가운데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변수들이기도 하다. 관측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져야 하는지, 이를 분석하는 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KDI 북방경제실에서는 북한의 물가와 환율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국내외 통틀어 이 분야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최지영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의 물가와 환율에 관련한 <대화>를 진행하였다.

일시 및 장소

2020년 6월 26일(금) 오후 2시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재스민실

사회자: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

대담자: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가격과 환율의 개념

■ KDI 북방경제실에서는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오늘 세 번째 <대화>는 최지영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되었다.

현재 외부세계의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북한경제를 볼 때 가장 많이 바라보는 변수가 시장가격 변수, 즉 물가나 가격 및 환율 변수이다. 물가와 환율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즉각적으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북한의 시장 변화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관찰과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논문을 쓸 때 직접 인용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이 변수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쓰고 있는 시장 물가나 환율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고 할 수가 없다.

국내에서는 북한경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생산한다. 한국은행에서 북한의 경제성장률, 예를 들어 GNI 등을 매년 추정해서 발표하고, KOTRA 등을 중심으로 무역,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량을 추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물가와 환율은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추정과 발표가 없다. 비공식적 추정으로만 생산되고 활용되는데, 이러한 한계 때문에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경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분야로서 물가와 환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랫동안 한국은행에서 실무를 담당하셨고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통일연구원의 최지영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먼저 북한의 물가, 가격, 환율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제반 가격이 계획 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공식가격 체계(국정가격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공식가격 체계는 상대적으로 변화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도 그러한지, 또 공식가격 체계가 현재 북한에서 기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의 가격 체계는 원래 계획가격을 기본으로 하였다. 사회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마르크스 경제학 이론에 기초하여 일정한 법칙에 근거한 계획가격을 설정하게

된다. 1985년에 발간된 북한의 경제사전을 보면, ‘가격계획화’라는 항목이 따로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발전, 사회주의 경제의 가치법칙에 근거해서 국가가 가격을 계획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이를 ‘가격의 일원화’라고 부른다. 또한 사회적 필요노동 지출에 근거해서 그 가치에 맞게 가격을 설정한다는 가격 결정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격을 제정하고, 상업기관이나 기업소들은 가격 제정 권한이 없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는데, 대부분 공산품인 국영기업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가격통제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고, 협동농장 같은 생산단위나 가계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가격통제가 유연하게 적용되었다.

가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품에 대해서는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이 있고 서비스가격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된다. 가격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 상황이 과도기적 사회주의인 만큼 모든 원칙들이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업 부문의 생산은 원자재에 대한 원가와 투하된 노동시간을 비교적 계산하기 쉽기 때문에, 도매가격의 설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소매가격은 필수재와 사치재에 대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국가가 결정한다. 필수재는 가격보조를 통해 낮은 가격이 결정되지만, 사치재에는 높은 가격을 매긴다. 소유형태에 따라서도 협동농장과 같이 국영이 아닌 협동적 소유에 기초한 경우 유연한 가격을 적용하고 개인 부업 생산물의 가격은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북한의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개인 부업 생산물이나 잉여 농산물의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북한은 생산단위의 소유형태, 재화와 서비스의 필요에 대한 가치판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가격 체계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가격 체계는 계획경제가 붕괴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언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1990년 이후에 이런 혼란이 심각해졌으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 암시장 관련 자료를 한국에서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북한의 제도 변화를 추적해 보면 가격제도의 변화는 더 빨리 이루어졌다. 1992년에 임금, 국정가격을 인상하는 가격현실화 조치가 취해졌으며, 1994년에는 도매가격의 산정 방식을 개편하였다. 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소비재의 경우 국가배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격제도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경제가 이원화되었는데 공식경제에서는 계획가격인 국정가격이, 비공식경제에서는 시장가격을 기반으로 자원이 배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에는 시장거래를 부분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이 합법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생산단위의

가격 결정 권한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2015년 개정된 기업소법은 생산단위의 가격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소는 '정해진 가격 제정 원칙과 방법'에 따르면 '구매자의 수요와 합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체로 정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획을 통하여 생산단위에 원자재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기업들이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위해 시장판매를 비공식적으로 확대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업의 가격 제정 권한이 기존의 공식적인 가격 제정 틀 내에 반영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정가격의 수준은 가격 산정방식 등의 변화가 없는 한 장기간 지속된다. 예를 들어 도매가격은 원가, 이윤, 거래수입금으로 구성되는데 원가 책정방식, 이윤 분배, 거래수입금의 비중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에 따른 시장가격의 변동과 비교하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국정가격이 큰 폭으로 변화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두 차례이다. 1992년에 임금과 구매가격, 국정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하였고, 2002년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이른바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인데, 이 때 임금과 국정가격을 현실화했다. 당시 등장한 것이 '쌀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제정한다는 원리였는데, 쌀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상품이었기 때문에 쌀과의 상대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새롭게 책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때 이루어진 국정가격 변경은 '가격현실화'라고 볼 수 있다. 계획가격과 시장가격 간 격차가 커지면 차익거래를 위해 자원이 시장으로 유출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1992년에 북한이 가격현실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그 당시에 계획경제 내 공급 부족이 만연해 있었고,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커져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992년과 2002년 두 차례의 가격현실화 조치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본다.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가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경제 부문의 원자재 공급과 이를 활용한 생산이 원활해져야 하는데, 계획경제 복원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7.1 조치 이후로 북한은 국정가격의 전면적인 인상을 시도하지는 않고 있다. 2009년에 신권과 구권을 1:100의 비율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가격은 변경시키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가격현실화 조치가 계획경제 복원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국정가격의 역할이 축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생산물의 일부를 시장에 판매하게 되면서 국영 생산단위에서도 시장가격에 준하는 가격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경제 전체에서 국정가격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보고서에는 국영상점의 식료품 가격이 국정가격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쌀가격의 경우 44~46북한원/kg으로 나타나 화폐개혁 이후에도 2002년 7.1 조치 이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정가격을 적용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로 이 국정가격에 의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 설명을 들으니 가격 체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정리해 보자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니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사회적인 필요노동, 즉 가치 법칙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고 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국정가격으로 구현했다. 가격은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각종 요금으로 구분되는데 사회적 필요노동이라는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은 도매가격, 그중에서도 기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공업 부문 가격들은 국정가격 체계가 잡혀있다. 수매가격의 경우 상대적으로 농민 협동조합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다.

아주 엄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통제되어 있는 가격 체계인 것 같고, 1992년에 가격현실화를 통한 변화를 겪었는데 당시 이미 국정가격 체계가 실제 자원배분과 괴리가 있었을 것이고, 북한도 이를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다. 이후에 북한경제가 상당한 혼란을 겪었고 2002년 7.1 조치로 한 번 더 가격현실화 조치를 통한 변화가 있었다, 그 후에는 사실상 국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자원배분은 유명무실하고, 사실상 시장가격에 의한 자원배분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배급가격(식량)에 대해서는 국정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다.

북한의 가격과 관련해서 큰 그림이 그려진 듯하다. 그렇다면 환율은 어떠한가? 북한의 공식환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다. 북한에서는 공식환율이 국정환율, 공정환율, 무역환율 등 여러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지금도 공식환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한 기능하는지도 궁금하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외화관리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고, 북한도 전통적으로 그런 체계를 따라 왔으며, 국정가격처럼 공식환율이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환율을 ‘환자시세’라고 불렀다. 고정환자시세, 결제환자시세, 현금환자시세 등 종류는 다양하지만 2004년에 개정된 외화관리 법을 토대로 보면, 북한의 중앙재정지도기관, 즉 재정성이 정하는 고정환율을 기초로 조선무역 은행이 현찰매매율(현금환자시세)과 전신환매매율(결제환자시세)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15년에 개정된 중앙은행법에 새롭게 ‘기준환율’의 결정 권한이 추가되었다. 기준환율까지 중앙은행이 제정하도록 추가된 것으로, 환율의 결정과 안정에 관한 기능이 재정성에서 중앙은행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외환관리법은 그 후에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외환관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제도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준환율을 제정한다는 것으로 볼 때 ‘공식환율’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에 따르면 자국의 화폐가치, 상대국의 화폐가치, 무역상품의 국제시장가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무역상품의 국제시장 가격이나 북한의 원화 가치가 수시로 변하는 데 비해 공식환율은 가격개혁이나 화폐개혁과 같은 큰 제도적 변화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었다. 즉, 공식환율 역시 인위적으로 결정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환율은 2002년 7.1 조치 이전에는 공식환율, 무역환율로 구분되어 있다가 7.1 조치 이후 공식환율 하나로 통일되어 한국에서도 이것을 입수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환율 자료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연도별로, 독일의 분데스뱅크(Bundesbank)는 월별로 환율 추세를 발표해 왔다. 분데스뱅크 리포트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환율은 2002년 7.1 조치 때 1달러당 2.2원 수준에서 1달러당 150원 수준으로 큰 폭의 인상이 있었다. 당시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괴리가 컸기 때문에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자국 화폐 가치 변동에 맞게 현실화한 것이다.

그 후로는 큰 변동이 없다가 2009년 화폐개혁 후 한 차례 평가절상이 이루어지면서 1달러당 100원 정도 수준으로 변동하였다. 화폐개혁 당시 국정가격의 수준은 변하지 않았는데 공식환율만 평가절상한 것이다. 2009년 평가절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없지만, 추측건대 국정가격이 북한경제에서 이제 큰 의미가 없고 국정가격 및 국정임금의 조정이 인플레이션 등 혼란만 가져왔기 때문에 국정가격은 유지한 채 화폐자산을 몰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닐까 싶다. 가격현실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므로 환율현실화를 함께 단행할 필요는 없었지만, 공식환율을 평가절상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의 외화수입을 확대 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환율은 북한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될 때 확인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공식환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시장환율은 달러당 8,000원 수준인데 공식환율은 100원이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약 80배 비싸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 후에는 최근까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가격과 시장환율 형성 과정

■ 환율도 가격과 비슷하게 국가가 결정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즉, 국가의 중앙재정기관이 고정환율을 정하고 이 고정환율에 기초해서 조선무역은행이 환자시세를 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셨다. 2015년에 중앙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주요한 기능으로 기준환율의 제정이 추가되어 환율 결정의 주체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도 하셨다. 현실적으로 달러당 8,000원인데 공식적으로 하면 100원으로 정해져 있는 등 괴리가 많은 것 같다. 가격도 마찬가지로 실제 쌀가격과 공식적인 배급 가격은 차이가 큰 것 같다.

결국 북한의 실제 경제를 보려면 공식적인 부분보다 시장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일단 ‘시장’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보면 좋겠다. 일반적인 시장도 불법적인 부분과 비공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가격이 혼란해지곤 하는데 북한의 시장가격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공식가격 체계와 달리 시장가격 체계는 북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일반적인 시장경제의 가격 체계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그 시장가격 체계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북한의 시장가격 체계 형성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일반적인 시장경제 가격 결정과 유사한 측면도 있고 상이한 측면도 있는데, 갈수록 유사한 측면이 많아지는 것 같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시장거래가 허용되는 재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기존 농민시장에서는 잉여 농산물의 거래만 허용되었으나, 소비재는 종합시장을 통해, 생산재는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통해, 수입재는 수입 물자교류 시장 등을 통해 거래가 허용되었다.

북한도 전부터 개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공급에 근거한 가격을 허용하고 있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격의 종류에는 상품에 대해서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이 있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과 운임이 있다. 소매가격에는 협의가격이나 농민시장가격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전에는 이런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잉여농산물에 한정되었다. 그 품목의 범위가 비공식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암시장 가격이 입수되기 시작했지만 매우 부분적이었다. 시장가격이 정기적으로 입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고, 중국 상인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서 북한 일부 지역의 시장물가가 비교적 정기적으로 입수되어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재인 식료품의 시장가격에 국한되고, 생산재의 시장가격은 거의 입수되지 않는다. 이는 북한의 가계소비가 시장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비재 시장가격 체계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시장가격 체계와 유사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일단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변동이 비교적 잘 설명된다. 예컨대 곡물수급 여건이 악화되는 2~3분기에 곡물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곡물생산이 악화된 해에는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대북제재 강화로 정제유 공급이 제한되면 가격이 바로 상승한다. 또 교역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시세의 추세와 크게 괴리되지 않는다.

소비재 시장가격만 보면 2000년대 초중반 북한의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이 만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경제에 해당하는 암시장은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리스크가 큰 만큼 가격할증이 반영되므로, 경쟁이 활발한 경우의 가격 결정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는 원래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이 지배적이어서 화폐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경제인데, 퇴장된 화폐가 시장으로 유입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사회주의 경제의 인플레이션은 크게 은폐 인플레이션(hidden inflation)과 억압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의 두 종류가 있다. 은폐 인플레이션은 시장가격이 관찰되지 않고 공식가격만 관찰될 때 감춰진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억압 인플레이션은 그간 교환 대상이 없어서 잠자고 있던 화폐가 시장 허용과 동시에 갑자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즉 억압되던 것이 시장에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다.

2000년대 북한의 인플레이션은 후자의 형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소비재 시장 거래는 1990년대와 7.1 조치 이전, 즉 종합시장 등장 이전까지 공식적으로는 불법적인 성격이었으나, 이제 소비재 시장 거래가 허용되면서 퇴장되어 있던 화폐가 분출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설은 당시 임금 수준이 현실화되면서 상승하였는데, 현금 형태로 지급된 임금을 통해 유동성이 증가하여 물가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가설이다. 시장거래를 처음 경험하면서 발생한 혼란이 2000년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시장거래를 허용한 이후 북한의 시장가격은 10년 정도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시장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여전히 일반적인 시장경제와는 다른 부분도 있다. 북한경제는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과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계획부문의 자원이 시장으로 유출되기 쉽다.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로 인한 차익거래가 지속되면서 자원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지역간 가격에 있어 변동성의 시차는 없지만 레벨은 다르다는 특성이 나타난다. 가장 자주 관찰되는 대표적인 3개 지역(평양, 신의주, 혜산)의 가격 수준과 환율을 비교해 보면, 평양의 가격 수준이 가장 낮고 혜산 지역이 가장 높다. 평양의 가격이 낮은 이유는 물자가 가장 풍부하고 배급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신의주처럼 도매시장이 대규모로 있거나 물자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지역도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 반면, 혜산은 국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급망을 통한 물자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시장을 규모에 따라 구분한 연구에 따르면, 혜산 지역에는 규모가 작은 시장밖에 없다. 평양에서 남는 물자나 중국에서 들어온 물자는 신의주와 같은 도매시장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혜산까지 전달돼야 한다. 전국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어디나 가격 수준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지역에 따라, 통신과 교통의 발달 수준에 따라 가격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서 시장의 발전이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생산재 시장거래도 2000년대 이후 부분적으로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의 가격 정보는 일부 농자재 이외에는 거의 입수되지 않고 거의 알려져 있지도 않아서 기업 및 산업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사회주의 시장가격은 시장경제에서 생각하는 비공식적인 암시장 가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시장가격도 아닌 것 같다. 추세는 점점 시장가격에 근접하는 것 같다. 또 다른 점은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평양과 같이 계획이 잘 되어 있고 물자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곳들은 시장으로 연결되면서 시장경제도 안정화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은 혜산의 경우 가격 수준이 높게 형성되는 등 지역별로 분화된다고 하셨다. 점차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체제 자체가 사회주의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개념적으로 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환율도 가격과 마찬가지로 궁금하다.

시장환율의 형성 과정도 기본적으로는 시장가격의 형성 과정과 유사하다. 원래 외화관리를 국가가 독점해야 하고 개인이 외화를 소유한 경우 '외화와 바꾼 돈표'와 교환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이 제도가 1990년대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북한의 시장환율 형성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외화 통용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변화이다.

가장 큰 변화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시장에 만연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외화 통용이 꾸준히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외화 통용이 '자산대체'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2009년 화폐개혁 직후 '초인플레이션'에 준하는 물가상승이 나타나면서 '통화대체'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즉, 가치저장 수단으로 외화를 보유하다가 화폐개혁 이후에는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큰 분기점으로 작용한 2009년의 화폐개혁은 몰수형 화폐개혁이었다. 국정가격의 변화 없이 구권과 신권을 1:100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구권 형태로 가지고 있던 화폐자산을 몰수한 조치로 보였다. 그것이 국내 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서 초인플레이션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그 후로 외화의 통용 수준이 가치저장 수단, 즉 자산대체 뿐만 아니라 통화대체로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외화 통용 수준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환율이 상승하다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안정되는 추세를 보인다. 대북제재 강화 이전까지 북한원/달러 환율은 8,000원 선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와 같은 환율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환율이 오르기도 하고, 환율의 시세가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추세도 보이고는 있다. 최근 수집되는 북한시장의 북한원/달러 환율과 북한원/위안 환율로 재정환율을 계산해서 국제시세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제시세에 나타난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면 북한시장의 북한원/위안 환율의 하락이 나타난다. 북한시장의 환율, 시장환율 형성도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에서의 환율 형성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북한경제가 세계경제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물가와 마찬가지로 시장환율에 있어서도 지역적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역간 환율 격차가 뚜렷한 것 역시 북한시장의 발전 정도가 높지는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시장가격 관찰과 연구방법

■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다. 현재 북한의 환율은 말씀하신 대로 암시장의 환율도 아니고, 시장경제에서의 환율도 아닌 것 같다. 다만, 상당한 정도로 우리의 시장환율 결정과 유사한 형태로 결정된다고 설명해 주셨다.

북한에서 가격과 환율의 기본개념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공식가격이나 공식적인 환율도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시장가격이나 시장환율이 북한의 경제자원 배분을 규제하는 기본 기제가 되었고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제 시장 가격과 환율에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북한의 시장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관찰하여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로 생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와 같은 데이터 생산은 누가 담당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시장가격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암시장 가격이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간헐적으로 입수되기 시작했지만 매우 부분적이었다. 시장가격이 정기적으로 입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2000년대 초반에 주로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에 근거한 학술적 연구에 의해서 데이터가 축적되었다. 주로 쌀가격이나 북한원/달러 환율의 분기별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2009년경)부터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에 기초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오는 ‘북한농업동향’ 계간지에 2013년부터 북한시장의 식료품이나 농자재 가격이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다. 식료품의 비중이 크고, 정제유와 환율 데이터가 비교적 정기적으로 입수된다.

북한의 시장가격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수집되기 시작했지만, 점차 북한경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이용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에 기초한 언론들이 이 수요에 부응해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데일리NK나 아시아 프레스에서 북한시장의 쌀, 옥수수, 돼지고기, 휘발유, 경유 가격과 북한원/달러, 북한원/위안 환율을 월 1~2회 정도 간격으로 수집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데이터들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많은데, 여러 품목이 입수되고 있고 식료품의 경우 중량이나 품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그 추세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곡물의 수급 상황, 계절성, 수출 중단 등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추세를 통해 지금 북한경제의 상황 파악, 신뢰성 판단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 말씀하신대로 월별 또는 분기별 데이터가 통용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시장가격 하면 쌀가격과 경유 가격 등 몇몇 상품의 가격이 떠오른다. 이를 대표로 삼아 물가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북한의 물가로는 쌀가격이 자주 언급된다. 이를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입물가의 등락 등의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는지, 북한에 과연 물가라는 개념이 있는지도 애매한 것 같다. 주요 상품 한두 가지 품목에 대한 물가만 추정이 가능한데 다른 품목들은 어떠한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한 물가지수의 산출이 가능할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물가’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북한농업동향’에 실린 식료품 가격을 이용하여 Food CPI 정도는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자료들은 대부분 식료품이기 때문에 공산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포함된 소비자물가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물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가계의 품목별 지출 비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격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출을 많이 하는지 가중치를 적용해야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중치 적용 작업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며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설령 가중치 조사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북한에 거주하던 때의 전체 소비 중 식료품에 대한 지출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들은 국가에서 제공받은 교육서비스라든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서 시장가격만으로 소비자물가를 측정한다는 점도 한계가 있다.

북한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가계의 지출품목별 비중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식료품 이외에 가구 내구재,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은 계획에 의해서 제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구분하는냐의 문제도 있다. 즉, 시장거래에 대한 가계별 의존도가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북한의 ‘소비자물가’라고 볼 수 있는냐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경제 내 시장경제의 비중이 확대되어 있는 만큼, 북한가계의 생활수준 파악과 북한경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북한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은 향후 필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북한 시장가격과 물가의 특징

■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개념으로 하나의 지표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개념과 지표를 만드는 것은 북한경제 이해에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북한의 시장가격과 물가의 특성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시장가격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고, 관찰 가능한 특징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별 물가 차이의 유무나 계절성, 불안정성, 상품가격 간 연동성 등 2000년대 후반부터의 북한 시장가격의 특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북한의 물가 수준이 중국과 관련이 있는지, 공식가격과 관련하여 한도가격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가격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올랐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는데 이것이 진짜 가격이라 할 수 있는지, 공식가격 또는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개입한 가격과의 차이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별 차이와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시차는 거의 없으나 가격이나 환율 수준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혜산이 국경지역이지만 가격이나 환율 수준이 평양, 신의주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관찰이 되지 않는 지역도 많다. 황해도, 강원도 지역의 가격 정보들은 수집이 잘 안되는데, 아마 국경에서 멀고 평양이나 대도시에서만 지역일수록 높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CPI라고 하면 보통 도시지역의 물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평양, 신의주, 혜산의 경우도 도시지역 물가로 관찰하고 있는 것인데, 농촌지역의 경우는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북한은 도시화 비율이 별로 높지 않고 농촌 비율이 높는데, 농촌지역은 식량과 같은 재화를 구입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폐 경제가 얼마나 확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농촌지역까지는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공식가격은 장기간 변화가 없지만 시장가격은 변동성이 높다. 곡물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처럼 대표적인 '상품가격'은 국제시세와 연동되어 국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북한시세를 달러 표시 가격으로 전환해서 비교해 보면 국제시세를 따라가는 추세가 분명히 나타난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을 때 북한에서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북한은 곡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아니지만 식량이 부족한 국가이고, 일부

곡물이 중국을 통해 상업적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에너지의 경우는 당연히 100%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시세의 영향을 받으며, 어떤 충격이 있을 때는 그 영향이 더욱 뚜렷하다.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고, 최근 원유의 국제시세가 급락했을 때 북한의 휘발유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국제시세의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환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시세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북한원/달러 환율과 북한원/위안 환율로 북한시장의 위안/달러 재정환율을 계산해 보면 국제시세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시적으로 북한시장과 국제시장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북제재 이전까지는 이 격차가 2분기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데일리NK 자료에 따르면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시장에 상대적인 위안화 강세가 나타났지만, 아시아프레스 자료를 이용한 북한시장의 위안/달러 재정환율은 국제시세와 유사한 흐름이다. 최근에 환율 데이터를 발표하는 데일리NK와 아시아프레스 두 매체가 좀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더 확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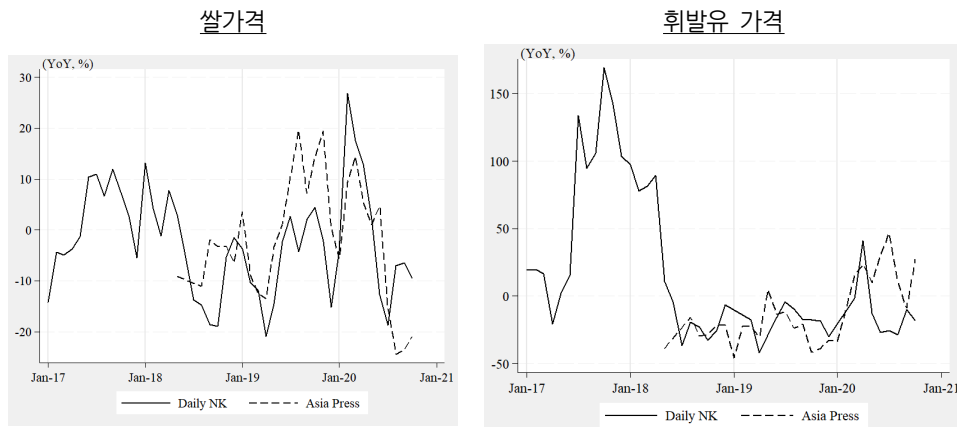
당국의 개입과 그 영향을 질문하셨는데, 북한 당국이 시장가격에 의한 자원배분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시장가격이 너무 폭등하면 이에 개입한다는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입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쌀을 8,000원 이상으로 팔지 말라”와 같은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한도가격이라고 한다. 한도가격이 얼마나 작동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올해 상반기에도 2월 초 코로나19로 북중간 국경을 통제한 후 쌀가격이 급등했다가 2월 말에 하락세로 전환되었는데 정부가 한도가격을 통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도가격은 시장 거래를 허용하면서부터 존재했지만, 시장의 물자 부족이 심각하거나 화폐개혁 직후처럼 북한원의 가치가 급락할 때는 한도가격도 무의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2월 초 북한시장의 물가가 급등세를 보인 이후 다시 하락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진정되었고 실제 물자 부족이 심하지 않아 한도가격을 통한 개입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계절성에 대해서는, 곡물 가격 같은 경우 계절성이 비교적 뚜렷하다. 수확 직전 곡물이 부족한 시기(춘궁기)에 해당하는 2, 3분기는 변동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전기 대비 많이 상승했다가 4분기에 수확을 하면 하락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이 패턴은 곡물 수급이 악화된 연도에는 더 뚜렷하다. 곡물 수급이 양호한 연도에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는 하지만 곡물 수급의 계절성은 나타난다.

상품가격 간의 연동성은 옥수수와 쌀 가격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을 비교해 보면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이 쌀보다 높게 나타난다. 곡물 수급 상황이 매우 안 좋으면 옥수수의 상대가격이 높아진다. 물론 국제 곡물 시세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쌀과 옥수수 간의 상대가격은 식량 수급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옥수수는 매우 변동성이 강한 지표 중 하나다. 옥수수의 가격변동성이 가끔 쌀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배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북한가계들에 있어서는 옥수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가계 중에 소득수준별로 옥수수를 꼭 사야 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그들에게는 옥수수가 필수재라서 수요 가격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같은 곡물이지만 곡물의 특성에 따라서 상대가격과 특징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1] 북한의 시장가격



주: 1) 데일리NK는 평양, 신의주, 해산 지역 평균가격을 월별로 환산한 가격(전년동월대비 변동률)
2) 아시아프레스는 발표자료를 월별로 환산 가격(전년동월대비 변동률)

자료: 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 자세한 설명 감사드린다. 북한의 시장가격 결정 요인은 상당히 다양한 것 같다. 크게 보면 국제가격에 따라가기도 하고, 계절성과 같은 특징을 보면 국내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지역별로도 물가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확실하게 개입한다는 점을 보면 정책적인 요소까지도 가격에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데, 다시 말하면 가격 변동을 분석하면 그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환율도 물가와 비슷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상품은 주로 식료품부터 쌀이나 에너지와

같은 소비재 가격이 있고, 환율은 북한 원화와 원화 대비 달러 환율, 원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정례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환율과 가격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드리려고 한다. 바로 데이터의 대표성에 관한 것이다. 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등의 매체에서 북한의 가격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수집된 가격과 실제 가격과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율과 쌀가격은 기본적으로 데일리NK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온전히 신뢰해도 되는 것일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을 추가로 조사해서 검증하지 않으면 불확실하다고 봐야 할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 데이터는 데일리NK가 보도하는 자료의 시계열이 가장 길기 때문에 자주 이용된다. 그렇지만 데일리NK 자료는 공식적인 통계 당국의 발표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다시피 쌀의 kg당 시장가격도 품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조사되는 품목의 규격과 품질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든지 왜곡된 가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가격의 변동성만 가지고 북한경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물가와 환율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북한시장의 환율 변동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데일리NK와 아시아프레스의 자료를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쌀, 옥수수, 정제유의 가격 움직임은 비슷하지만, 환율이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대북제재 이후로 데일리NK에서 발표하는 환율에서는 위안화 강세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아시아프레스는 현재의 국제시세와 비슷하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조사 지역의 차이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 두 자료를 종합하여 교차 검증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다.

■ 시장경제에서는 거래소나 중개인이 존재하고 환율이 중앙집중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직접 크로스 체크가 되고 경쟁을 통해 환율이 형성된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시장이 없다. 모두 점두거래, 즉 개인 환전상이 하는데 이 개인 환전상들이 매번 “오늘은 얼마로 하지”고 하며 함께 정하는 게 아니다. 개별 환전상들이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환율을 고시하고, 환전상마다 환율 차이가 발생한다.

환율은 그 속성상 원하는 대로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환율은

얼마”라고 정하는 것은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수치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상품의 가격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적용되지만, 환율은 그렇지 않다. 환율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공지하는 것도 아니고 적용되는 바가 모두 다르다. 그리고 아시아프레스는 일본 매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데이터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인가?

아시아프레스는 2017년 4월부터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 자료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데일리NK보다 시계열이 짧고 조사 대상 지역도 다른데 데일리NK는 평양, 신의주, 혜산을 주로 조사하여 발표하지만 아시아프레스는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자료를 조사한다. 데일리NK 자료에 따르면 접경지역인 혜산의 가격과 환율 수준이 평양이나 신의주보다 비교적 높는데, 아시아프레스는 접경지역에 국한되다 보니 가격이나 환율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3~4월 데일리NK의 북한원/달러 환율은 세 지역 평균 8,000원대였던 반면, 아시아프레스는 9,000원을 넘어가기도 했다. 이러한 차이가 조사 지역의 차이인지, 조사 시점의 차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데일리NK와 아시아프레스의 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각각의 추세가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물가와 환율 변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시기 북한의 시장물가와 환율 안정

■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북한의 시장물가와 환율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다룬 것 같다. 지금부터는 오늘날 시장물가에 대한 큰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2년 중반 또는 2013년 초부터 시작된 시장물가와 환율의 안정이라는, 북한경제로서는 조금 의외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이다. 최근 북한경제 연구의 매우 커다란 쟁점 중 하나이다.

2013년 이전까지 북한경제는 물가가 급속도로 올랐고 환율이 급속히 절하되었으며 이것이 당연한 현상으로 보였다. 이 당연한 현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쪽에서는 통화과잉(monetary overhang), 즉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과잉화폐가 항상 있었다고 설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 측면의 물자부족 현상이 항상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장소인 ‘시장’이 북한경제 전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2009년 이후로는 북한 당국도 이런 현상을 다 파악하면서도 재정에 대한 원천이 점차 사라져서 화폐 발권력(seigniorage)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종합적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환율은 계속 엉망진창이 된다고 했다.

이러한 설명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다. 또 그 추세가 장기간 평평하게 유지되는 듯이 보인다. 다른 저개발국에서 이렇게 장기간 안정적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정말로 이전까지의 북한과는 달라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라는 또 다른 이슈와도 연관성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년에 물가와 환율은 한 차례 급등한 이후 대북제재 강화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다. 대표적으로 쌀가격이 안정세인 것은 분명하다. 인플레이션은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 측과 공급 측 각각의 요인을 구분해야 하지만 북한시장의 인플레이션은 각각의 요인으로부터의 인과성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설명되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동성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통화량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할 만한 제도 변화를 제시하여 개연성을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시기별로 지배적인 요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시장의 물가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즉, 어떤 시기의 가장 주된 요인을 통해 물가상승을 설명하는 것인데 물론 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에 만연한 인플레이션도 화폐적 요인과 실물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실물적 요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는 실물시장의 부족을 넘어선 화폐적 요인이 있다고 추측되었고, 그 때문에 통화증발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통화량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검증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물가는 2012년에 한 차례 오르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의 물가상승은 당시 북한이 시도했던 6.28 방침이라는 시범적인 조치의 영향이 아닌가 추론하고 있다. 전면적인 개혁은 아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첫 번째 개혁조치였다. 지금은 제한적이고 시범적인 조치였음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2002년의 7.1 조치와 얼마나 유사한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2002년의 7.1 조치는 가격개혁을 포함하였고,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면서 북한주민들은 한동안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따라서 2012년에도 북한시장 내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유추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장물가와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고, 이러한 환경은 김정은 시기 초

정권의 안정성에 어느 정도 유리한 여건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물가와 환율의 안정 요인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면 우선 화폐적 요인이 있다. 물가가 안정된 것은 과잉유동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화증발이 축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단 북한 당국의 통화증발 요인이 축소된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화폐를 더 발행한다 해도 시장가격에 준해서 살 수 있는 물자가 많지 않게 되었다.

정책적 요인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여러 가지 재정, 금융 부분의 개혁을 시도한 것을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업은행 기능의 강화 또는 전자카드의 사용 확대, 외화 예금의 허용과 같이 과잉유동성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북한원화와 외화가 어느 정도 공식금융 내로 흡수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크게 확대될 만한 제도 변화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크게 없었다. 가격개혁이나 화폐개혁이 시도되지 않았고, 시장을 폐쇄하는 등의 보수적인 정책도 시도되지 않았다. 시장을 통제하면 거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격에 마크업이 붙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렇듯 정책 변화의 불안정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었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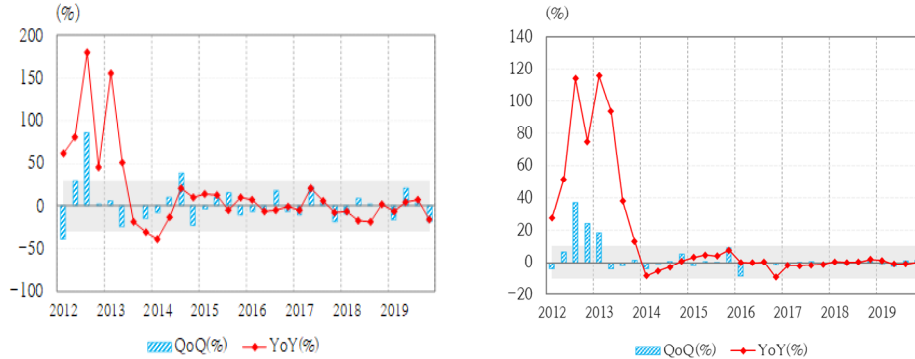
실물적 요인을 보면, 관찰 가능한 데이터가 주로 식료품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식량 수급 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식량 수급 여건 개선은 식량 생산량 추정치로 확인할 수 있다. 물자와 식료품의 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국영사업 부분의 확대이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국영사업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 부분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계획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소지표에 대해서는 기업에 가격 제정과 판매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대형 소매상점들도 늘어났는데, 국정가격이 아닌 시장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된다.

한편, 경공업 국산화를 강조하면서 경공업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비재 공급이 증가하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생산단위는 소유형태는 국유라도 시장가격에 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종합시장 같은 여러 유통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소비재 유통망이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와 실물적

변화를 종합해 보면 대북제재 이전까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물가상승 요인이 크게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2] 북한의 쌀가격(좌)과 북한원/달러 환율(우) 추세



주: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 평균가격을 분기별로 환산
자료: 데일리NK.

■ 김정은 정권 들어 2012년도쯤에 한 차례 물가가 올라갔었던 것을 제외하면 네 가지 정도의 통제 요인이 있었다고 하셨다. 하나는 통화적 요인으로 통화증발이 통제되었다. 데이터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상업은행 기능이나 전자화폐, 은행권의 변화를 보면 사실상 통화증발 요인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통화가 흡수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셨다. 둘째로 정책적 불안정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진정된 부분이 있다. 세 번째 실물적 요인으로 특히 식료품 생산에 대한 공급 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국영상업 부문 확대에 유통망이 확대되었고 완전 경쟁 수준은 아니지만 상업에서 일정한 경쟁이 된다고 추정하셨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환율과 물가가 안정된 것이다. 종합해 보면 김정은 시기에 약간의 경제적인 개혁이나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시는 것 같다.

추가할 부분이 있다. 관찰 가능한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식료품 위주의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가계가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계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앵겔지수가 낮아지고, 가계 지출 비중에서 내구재나 고가의 전자제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했을 수 있다. 가계의

소비 지출구조가 변화했고, 식료품 이외의 다른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있었는데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어 있더라도 가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한 다른 부분이 더 상승했다면 그 부분은 데이터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관찰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북한에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북한경제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면 가계의 구매력 증가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관찰하는 데이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편이 옳을 것이다.

■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다. 관찰하는 데이터는 주로 쌀 가격, 식료품 가격이고 이들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소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출구조의 변화가 시장의 수요 변화로 나타날 것이고, 그 수요 변화가 식료품보다는 비식료품에 대한 수요 증대였다고 가정하면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실제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현재 데이터로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다. 북한 당국의 최근 정책을 보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나 시장환율의 급변에 대한 노이로제 같은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데일리NK 자료에서도 환율 추이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인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여러 변화 또는 개혁의 결과로 적어도 식료품에 있어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황만은 어떻게든 통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우연히 얻은 부산물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본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경제 강국을 건설한다고 천명했다. 집권 초기에는 중국에 무연탄을 수출하여 획득한 외화로 경기부양에 힘썼다. 대규모 건설은 대표적인 경기부양 정책이다. 집권 초기에 경제성과를 토대로 정권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경제적 성과를 정권 안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했다면, 2009년 몰수형 화폐개혁과 같은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화폐개혁은 현금을 몰수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북한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정책적 실패였고,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특히 상업은행의 기능 강화나 외화 예금, 중앙은행의 카드 발행 등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시도되었고, 이를 통해 유동성을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변화가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등 북한경제의 여러 변화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이미 북한에서는 달러라이제이션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혹자는 달러라이제이션이 북한의 물가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한편으로는 화폐주조차익(seigniorage)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이제 국내에서 돈을 더 찍어봤자 소화도 되지 않고 불필요해진 것이다. 달러라이제이션이 되면 가격이 이중으로 표시되는데, 달러 가격은 가치의 변동이 크지 않고 북한화폐 가격만 변화한다면 달러를 더욱 선호하게 되고, 결국 국내가격 자체가 사라지고 북한화폐는 외면받게 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북한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 달러라이제이션이 북한의 물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달러라이제이션이 진행되면 국제가격과 물가가 연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한다.

달러라이제이션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않아서 제가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해지면서 외화 통용이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상황은 일부 개발도상국의 달러라이제이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은 통화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자국 화폐의 가치를 달러에 연동하는 ‘달러화경제(dollarized economy)’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화폐개혁 이후로 물가가 급속히 상승하면서 외화로 급속하게 통화 대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당시에 북중무역이 급증하면서 외화유입도 증가하였고, 외화 통용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또한 2013년 이후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은 일정 수준에서 더 진전되지 않고, 북한원화의 가치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외화 통용 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다. 우선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을 외화예금규모와 같은 객관적 지표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되는 북한시장의 가격들은 대부분 북한원화로 표시되고 있어 거래 수단으로서 외화의 역할을 파악하기 어렵다. 고가의 상품은 외화로 거래되겠지만, 식료품과 같이 가격 수준이 낮거나 일상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경우 북한원화 거래의 비중이 높을 수도 있다. 즉, 외화 거래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원화의 가치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북한원화와 외화가 공존하는 형태로 북한경제 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았다고 이해하고 있다.

- 달러라이제이션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 같다. 북한의 경우 일반적인 저개발국에서 보이는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과거 소비에트에서 이행한 이행경제(virtual economy)나 동유럽, 남미, 아프리카에서의 그것과도 다르다. 특정 시점에서 북한 원화와 외화 통용이 일종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조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다. 차후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대북제재와 북한의 시장물가 및 환율

- 이제 2016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대북제재와 북한의 시장 물가 및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김정은 정권에서 시장 물가와 환율의 안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바로 제재이다. 제재로 인해 북한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았고 특히 올해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유독 환율과 쌀가격에 변화가 없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제재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요한 이슈이므로 몇 가지로 나눠서 여쭙겠다. 우선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물가와 환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인데 이 인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장 정밀하게 관찰하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찰되는 물가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재가 강화되는 중이었던 2017년에 쌀과 정제유 가격이 급등했다. 정제유의 경우 제재의 대표적인 수입 제한 항목이기 때문에 2017년 말에 정제유의 수입상한이 축소되면서 실제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2017년 중반, 즉 수입제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정제유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 추세가 2018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그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2017년에서 2018년 상반기까지의 물가 급등은 제재로 인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중무역 등 제재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물가가 상승한 것은 제재 강화를 우려해서 미리 비축하려는 북한 내부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전에 계속되던 안정화 추세에서 약간이지만 변화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부터는 하락세로 전환하여 2019년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

- 아예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제재에 의해서 매우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요인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를 제재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환율과 물가다. 환율이 급등하고, 수입 물가도 급등하며, 제재에 대해 기대감을 형성해서 이 기대감이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역으로 실물경제가 먼저 변하고 가격변수가 영향을 받는 형태로 보인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일단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북제재 이후의 수입 항목을 보면 소비재는 비교적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에 직접적으로 걸리는 항목들, 예컨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전자제품과 같은 경우 제재로 수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공급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것이 명확하게 집계,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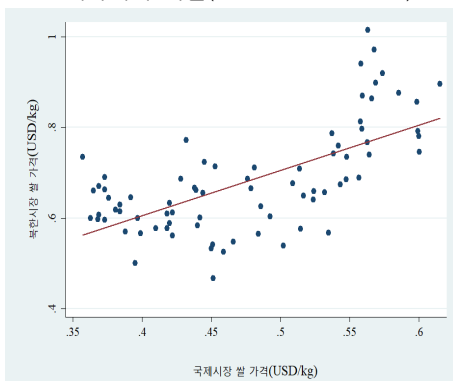
관찰이 가능한 자료들은 대부분 식료품 가격인데 국내에서 공급되는 품목이 대부분이고 북한은 곡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지 않다. 식량 수요량이 약 500만t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많이 수입한다 하더라도 30만t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곡물과 기타 식량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북제재 이후 식료품은 소폭이지만 수입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식료품은 대외의존도가 낮고 제재와 직접 관련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할 요인이 적다. 대북제재로 수입이 중단되거나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품목들의 가격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 물가에 대한 질문 자체가 불완전한 관찰,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관찰로 인한 질문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제재 대상 품목이 있고, 제재를 벗어난 일반 교역재가 있는데 관찰이 가능한 품목은 쌀과 같이 제재를 벗어난 일반 교역재이고, 이 품목들은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재에 실제로 영향을 받은 에너지 같은 품목은 일부 상승세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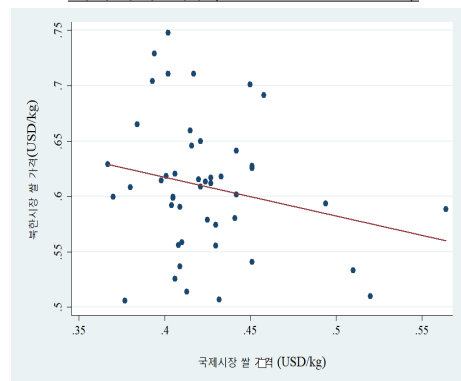
그렇다면 가상적인 질문이지만 만약에 모든 품목을 관찰했을 때 제재 대상 품목이든 아니든 북한의 물가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가상 질문이지만 혹시 설명이 되는 해석이 있을까 궁금하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관찰된다면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 제재 우회 경로, 북한가계의 소득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염두에 두고 분석해야 할 것 같다. 특히 북한가계의 지출과 관련된 소비재의 수급은 대외의존도가 낮을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강조했던 경공업 국산화 정책의 영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제유 등 제재 대상 품목의 가격 안정은 밀수를 통한 공급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북한가계의 구매력 저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외화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연탄 등 북한의 수출이 감소하면 곧바로 북한 당국의 외화소득이 감소한다. 대북제재 강화 직후에는 북한 당국의 외화소득이 감소하겠지만, 시차를 두고 북한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제재 이전에는 북한시장의 곡물 가격이 국제시세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재 이후에는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 즉, 제재 이후 국제시세와 곡물 가격이 괴리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여기에는 배급 등 국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에 상업적 수입인지 원조인지 무역형태는 불확실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이 식량 원조였다면 북한 당국의 배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북한 당국의 시장 개입이 시장가격 안정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북한시장과 국제시장의 쌀가격
대북제재 이전(2010. 1~2016. 6)



대북제재 이후(2016. 7~2020. 6)



주: 1) 데일리NK는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 평균가격을 월별로 환산한 가격.
2) 국제시장 가격은 (Thai A.1)의 가격임.

자료: 데일리NK, Worldbank.

■ 제재의 영향을 생각할 때는 공급 측의 교란뿐 아니라 그로 인한 소득 변화 등 수요 측 요인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리해 주셨다. 그렇다면 올해 북한경제의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까지와는 달리 2020년 현재 유난히 어렵다고도 하는데, 올해 북한 물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 평가해 주셨으면 한다.

올해 상반기를 보면 물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2월 초, 4월 말 두 차례 급등했다가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2월 초에는 갑자기 북중간 국경이 폐쇄되고 나서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아 북한경제의 심리적 불안이 확대된 결과였던 것 같다.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우려로 사재기가 발생하는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되었다. 특히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심리적 불안 확대가 비축수요로 이어져 2월 초에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북제재 강화 직후인 2017년에 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세로 전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은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되곤 한다. 실질적으로 물자부족이 심화되지 않는 한 쉽게 진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한도가격을 부과하여 시장가격을 통제했다고 하는데, 정부 개입의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

시장물가는 지난 4월 말에 또다시 급등했는데, 당시 여러 가지 정책 변화(수입제한 지시 등)가 그 요인으로 보인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수입하지 말라는 제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 장기화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을 수도 있다. 2월에 관찰된 것과 같이 4월말 상승세도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현재 옥수수나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로 반등한 상황이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현상도 보이고, 특히 춘궁기에 접어들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이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올해 물가는 상반기 2월 초, 4월 말에 뭔가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든 정책 변화든 어떠한 충격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된 것만은 분명하다.

환율 변동은 더 혼란스럽다. 시장환율 추세가 매체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NK가 발표한 환율은 4월 말에 하락하여 7,000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나타난다. 반면, 아시아프레스는 2월부터 조금 상승하여 9,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오히려 4월 말에 상승폭이 조금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즉, 두 매체의 환율 변동의 방향과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4월 이후 공채나 수입쿼터를 외화로 판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으로부터 외화를 흡수하려는 시도로,

외화수급 여건을 악화시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책 변화와 환율 변동이 잘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는 두 매체 간 추세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동 추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4월 말 이후 환율이 하락하는 이유로 국제시세의 변동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북한원 대비 위안화 환율은 두 매체가 비교적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5월 말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한 후 북한원/위안 환율이 하락하였다. 즉, 북한원/위안화 환율이 조정된 후 북한 원달러 환율이 국제시세에 맞춰 하락하면서 국제시세를 따라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 그럼 현재 공식가격과 공식환율,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이 대체로 어떻게 연관을 맺고 움직이고 보아야 할까? 매우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북한의 거시경제, 거래와 경제순환 과정에서 공식가격과 환율, 시장가격과 환율이 각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거시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각의 자원배분이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가계는 공식노동과 비공식노동을 통해 각각 소득을 얻는데, 공식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적더라도 교육, 의료서비스, 주택 등 직장과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받는다. 계층별로 다르겠지만 부분적이거나 국가 배급도 받고, 공식부문으로부터 소득을 분배받는다. 비공식노동은 일종의 부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소득을 얻는다.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한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장마당에서 재화와 서비스 판매는 비공식부문의 소득 원천이다. 배급망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의 소득과 지출은 일정 부분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아래로부터 시장이 확산되면서 이중경제가 확대, 안정화, 발전되고 있다. 기업의 이윤도 부분적으로는 시장판매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통제하는 자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장가격에 의한 자원배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업들은 원자재를 시장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고, 생산재의 시장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로부터 받는 기업의 생산도 계획가격의 적용을 받는 부분과 기업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기업소 지표로 구분된다.

물론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계획지표가 분명히 존재한다. 해당 기업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히 국방공업, 중화학공업 등 중요한 산업은 국가가 통제하는 계획지표의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 기업은 국가가 통제하는 계획지표를 충족한 뒤, 기업의

이윤 일부를 국가기업이익금이라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이 직접 원자재를 조달하고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기업이 내부에 유보한 소득은 임금인 생활비로 자체 배분되거나, 생산확대를 위한 원자재 조달이나 투자에 이용된다.

정부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등의 예산수입으로 구성된다. 북한경제 내 시장이 확대되어 있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계획지표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가 어떤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수입을 얻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연탄 수출이나 협동농장에 대한 구매도 정부수입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시장가격이 국정가격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쌀을 구입하는 가계는 국정가격으로 배급을 받는 가계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시장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 계획가격과의 차액만큼을 정부에 더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처럼 가계, 기업, 정부의 이원화된 수입과 지출이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가 지금의 북한 경제이다. 이원화되는 구조에서 결제도 원화와 외화로 이원화되어 있는 셈이다. 수입재, 고가 상품, 주택의 경우 외화로 거래되지만 식료품, 저가 상품 등은 물물교환이나 원화로도 거래되는 구조이다. 전체 경제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자금 중개 등 금융부문이다. 상업은행의 기능을 복구하려고 하고 있지만 워낙 금융제도 자체가 취약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저축에 기반하여 기업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다시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는 기능이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작동하고 있다.

배급에 대한 의존도는 북한 내 계층별,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다고 추정된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배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국경지역 출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북한의 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맞물려 순환하는 구조이고, 이 순환 구조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대북제재 이전까지는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의 정부, 가계, 기업 모두 공식적인 사회주의 경제부문과 비공식적인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계획가격과 비공식적인 시장가격이 동시에 존재하고 결합되어 있는 경제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북한의 물가와 환율에 대한 연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언해 주셨으면 한다. 후배 연구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다.

일단 물가와 환율이 국민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 신뢰도도 높지 않다는 것은 북한경제 연구의 큰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의 부족과 신뢰도 제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쉽게 극복하기도 어렵다.

현재로서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능한 범위에서 교차 검증하고, 국제시세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언제나 비관측되는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을 현상을 감안하여, 현재 관측되는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이다. 북한에서 나타나는 경제현상의 일부는 저소득 개발도상국, 사회주의 국가, 식량부족 국가 등이 갖춘 보편성으로 설명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다. 북한은 산업화가 일정 수준으로 진전되었다가 쇠퇴한 국가이며, 지나칠 정도로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특히 북한이 선택하는 경제정책들은 일반적인 경제원리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 북한의 경제정책과 이로 인한 경제적 성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경제현상으로 설명하되 북한이 가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북한경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도, 북한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큰 흐름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 연구도 어떤 시점에서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겠지만, 이를 교정하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

■ 오늘 많이 배우는 유익한 자리였다. 경제학자 입장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셔서 매우 흥미로웠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관찰과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양문수,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와 평가」, 『통일문제연구』, 제53호, 2010, pp.59~91.
- 이영훈,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전망: 가격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제220호, 한국은행, 2005.
- 이영훈, 「북한의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개혁개방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2호, 2012, pp.51~73.
- 이석기·김석진·양문수, 『북한 외화통용 실패 분석』, 산업연구원, 2012.
- 최지영, 「2019년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 시장물가 및 시장환율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제22권 제1호, 2020.
- 최지영,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 동향」, 『한반도포커스』, 제41호, 2017.
- 최지영,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경제분석』, 제23권 2호, 2017, pp.58~95.
- 최지영, 「북한의 물가와 인플레이션: 연구동향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1호, 2015, pp.27~55.
- 최지영, 『최근 북한시장의 물가 및 환율 동향』, KINU Online Series 20-13, 2020.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09)」,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 홍익표·동용승·이정철,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04-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북한문헌>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 연구소, 『경제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해외문헌>

- Mun, Sungmin and SeungHo Jung, “Dollarization in North Korea: Evidence from a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East Asian Economic Review*, 21(1), 2017, pp.81~100.
- Nuti, Domenico Mario, *Hidden and repressed inflation in Soviet-type economies:*

definitions, measurements and stabilization, Springer Netherlands, 1989.

<웹사이트>

데일리NK(<http://www.dailynk.com> 접속일: 2020. 7. 30).

아시아프레스(<https://www.asiapress.org/korean/> 접속일: 2020. 7. 30).

The World Bank, Commodity Markets(<https://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 접속일: 2020. 7. 30).

독일연방은행(<https://www.bundesbank.de/0>, 접속일: 2020. 7. 30).